

여야 4당 “5·18 망언 막고 제대로 된 진상조사위 구성하자”

문 대통령, 한국당 조사위원 임명 거부 5·18 망언 정국 새 이슈 부상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당 추천 5·18 진상조사위원 임명 거부’가 5·18 망언 파문 정국의 새로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문 대통령의 임명 거부에 대해 정치적 판단이라고 결코 넘어지고 있는 반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이번 막말 파문을 계기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왜곡을 차단할 수 있는 법(홀로코스트법) 제정은 물론 제대로 된 5·18 진상조사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선 자유한국당은 자당이 추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후보 3명 중 2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강력 반발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단과 미국을 방문 중인 나경원 원내대표는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열린 조찬 후 순방에 동행한 취재진과 만나 “청와대 판단은 사실 정치적 판단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자격요건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심히 유감이며 자세한 문제는 귀국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한국당은 자격요건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조사를 할 위원을 추천했다”며 “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들을 거부한 것은 한국당과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는 각종 불법사찰과 손해원·김경수 사태로 실정 위기에 몰리자 정치적 출구전략으로 야당과 국회를 모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는 여러 추천위원들의 제척사항을 외면했다”며 “국회의장(안종철)과 더불어민주당(송선대·이종성), 바른미래당(오승용)이 추천한 네 명의 위원은 가해자 또는 피해자를 제척하기로 한 규정을 어겼을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청와대 사실상 정치적 판단”
홍영표 “야3당과 퇴출운동 나설 것”
미래·평화·정의 “임명 거부 환영”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전날 청와대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후보 2명 재추천 요구에 대해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3당과 함께 문제의 발언을 한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는 것과 관련 “제소 이후에도 한국당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당은 야3당과 공조해 범국민적인 망언의원 퇴출 운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아울러 “5·18 역사 왜곡과 망언을 처벌하는 5·18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4당이 공동으로 다시 발의하겠다”며 “한국당 공청회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자행되는 범죄적 망언도 처벌 항목에 포함시켜 형법 등 일반 법률보다 더 강력히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한국당이 추천한 권태오·이동욱 후보는 자격에 해당하는 바 없어 청와대의 적절한 법적 판단이라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유럽 각국에선 나치의 반인륜적 범죄를 찬양하는 자에 대해서 5년 이하 징역형 등 강력 처벌하고 있다”며 “매번 반복되는 역사왜곡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판 홀로코스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같은 날 “청와대 재추천 요구는 상식적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왼쪽부터),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정의당 김충철 대변인이 12일 오전 여야 4당 공동으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5·18 특별법 14조의 피해자 제척 규정은 조사위가 조사한 사건과 관련된 조사위원의 심·의결권을 제척한다는 점에서 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자격 기준과는 거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 찾은 김진태 “공청회 주관적 의견 말한 것뿐”

한국당 시·도당 간담회…사과 없이 5·18유공자 명단 공개도 요구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12일 ‘5·18 민주화운동 공청회 망언’ 논란과 관련, “제가 말한 게 아니다. 공청회에 참석해 발언한 분들은 주관적인 의견을 말한 것뿐이고, 객관적으로 평가가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자유한국당 광주시·전남도당에서 연 간담회에서 “5·18 자체를 평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북한 개입설 등은) 진상규명 특별법에 의해 진상을 밝히면 된다”며 자신과는 관련이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5·18 진상규명에 대한 부분은 해석의 다름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5·18단체 등의 반발에 대해서는 “안타깝다. 아픔을 같이하고 있다”며 “진리가 왜곡됐다. 5·18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다. 좀 더 투명하게 해 진정으로 국민들의 존경도 받고 아픔을 함께하자는 뜻이다”고 말했다. 이어 “5·18 유공자 명단은 공개하는 게 좋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분들도 그것을 원한다”며 “저도 이분들 아픔을 함께한다. 다만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진정으로 피해 입은 분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당대회에서 득표율을 올리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전혀 아니다. 문제가 된 공청회 날도 갈 새가 없어 지방에서 전당대회 일정을 소화했다. 전혀 의도된 게 아니고 살면서 때로는 예기치 못한 이런 일도 생기더라”며 억울하다고 말했다.

논란 속 광주를 방문한 것에 대해서는 “원래 계획된 일정이었다. 못 올 이유 없다고 생각했다”며 “당원들과 기자들 상대하는 간담회 자리다. 다른 지역을 모두 돌았는데 호남만 돌지 않아 기왕에 오려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5·18 유공자 명단 공개가 위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분들조차도 명단을 공개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한다”며 “저희 아버지가 6·25 참전용사인데 자랑스럽다. 공을 세우면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다. 참전용사와 마찬가지로 5·18 분들도 그렇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김 의원의 광주 방문 소식이 알려지자 5·18단체와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일찍부터 한국당 당사를 찾아 항의 집회를 열었다. 김 의원이 당사에 도착하자 항의의 인파와 취재진이 몰려 혼란만 당사 앞이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오후에 전북도당을 찾아서도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전북에서도 김 의원은 5·18 동지회 회원 등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망언 3인방 당 윤리위 회부”…뒤늦게 수습 나선 한국당

김병준 “당 대표해 광주시민 등께 사과”
정치권 “논란 확산되자…뒷북대처” 비판

자유한국당이 당내 일부 의원들의 ‘5·18 민주화운동 모독 망언’과 관련, 12일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해당 의원들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 처리 과정이 남아 있어 파문이 진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5·18 공청회에서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을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신에 대해서도 관리직임을 따져줄 것을 요청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말한 뒤 “5·18 북한군 개입설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보수를 넘어 국민을 속보이는 행위”라며 “공당의 국회의원이 이런 주장에 판을 깔아주는 행동도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김용태 사무총장에게 진상에

대한 조사 보고를 받은 결과, 행사에서 발표된 내용이 심각했다”면서 “일부 발제 내용 중에는 헌정질서 문란 행위자를 옹호하는 대목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 행사에 참석한 우리당 의원들의 발언 역시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5·18과 관련된 한국당 공식 입장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민주화 운동’이었다는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은 지난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선언 이후 두 전임 대통령 기간에도 일관되게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변할 수가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5·18과 관련한 진실을 왜곡하거나, 그 정신을 폄하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지난주 우리 당 일부 의원들이 주최한 5·18 공청회 문제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5·18 희생자·유가족과 광주시민께 당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해당 의원들의 윤리위 회부와 관련, 김용태 사무총장은 “당 윤리위 규정에 따라, 오늘 김 위원장의

요구를 윤리위원장에게 전달해서 윤리위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며 “윤리위가 신속하게 여러 입장을 정리해 결론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당규에 따르면, 이 의원들에 대해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징계가 가능하다. 전대에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김진태 의원이 나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김순례 의원이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오는 27일 전대 출마가 불가능하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한국당의 이 같은 대응에 대해 ‘뒷북대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논란이 확산하니 4일 만에야 본격적 대응에 나섰다 때문이다.

또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제명과 5·18 왜곡·날조·비방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에도 나설 방침이어서 한국당의 반응이 주목된다. 만일, 한국당이 4당과 상반된 입장을 보일 경우 ‘5·18 모독 망언’ 파문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 기자 jkpark@

한국 형태양발전소 분양

동·식물 재배사(건물 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땅+건물+태양광 = 2년6개월(현금투자회수가능)
선로걱정없는 한국형

분양지역

- 경기도 안성시 잔여분 2기
- 영남 신북면 잔여분 5기
- 영광 흥농읍 잔여분 3기

2019년 10월 준공예정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개발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 ✓ 잠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